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해소 방안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 실장

lbh@hri.co.kr

I. 서론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실물경제에 큰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도 그로 인해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투자와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負)의 자산효과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경기가 급랭되면서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고령자,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이른바 사회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그 가운데에서도 경기 침체로 인해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임금 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 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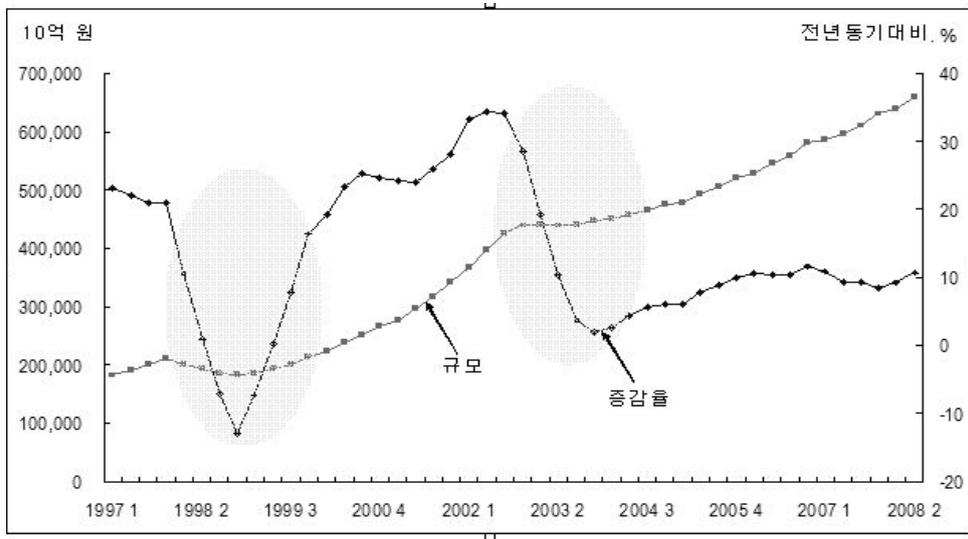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휴오대학(일본) 경제학 석·박사
- (현)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 실장
- (현) 경희사이버대학 강사
- 현대경제연구원, 『치미아이코노믹스』, 공저, 2008년.

특층 가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증가 속도도 빨라지면서 가계 부실이 또 다른 경기 침체를 불러올 우려 또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계부채 해소 문제가 단순한 사회안전망 강화 목적보다는 거시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하 국내 가계부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서울시 차원의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국내 가계부채 현황과 특징

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시 급감했던 가계 부채가 2005년 4/4분기부터 증가세가 커지면서 2008년 2/4분기에 660조 원을 기록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가계 부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3% 하락, 2003년 카드대란 시에는 1.9%로 급감하였으나, 2005년 9.9%, 2006년 11.6%, 2007년 8.4%로 매우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 국내 가계부채 증가 추이

국내 가계부채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가계부채 및 금융부채 규모 증가율이 미국보다 빠르다. 2007년 말 국내 개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미국에 비해 다소 낮으나, 2000년 대비 증가율은 66.0%로 미국 39.4%보다 29.6%p나 크다. 둘째,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크며, 규모도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국내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6년 4/4분기 37.3%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08년 2/4분기에는 34.8%까지 하락하였으나,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비중은 여전히 가장 높다. 또한, 절대 규모도 2003년 4/4분기 152.5조 원에서 2008년 8월 307.5조 원으로 101.6%나 증가하였다. 셋째, 가계판매 신용 증가를 통해 도시 가구들이 소비 지출을 증가시켜 왔다. 국민계정 상 가계최종소비 지출은 2008년 1/4분기 이후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2006년 3/4분기 도시 가구당 소비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4%에서 2008년 2/4분기 8.7%로 증가하였다. 이는 가계판매 신용 증가율이 2007년 3/4분기에 9.5%까지 하락하다 2008년 2/4분기에 약 18%로 급등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1〉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및 금융부채 비율 추이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미국 (%)	97.5 (102.8)	102.6 (107.3)	108.8 (112.9)	116.4 (120.8)	121.9 (127.2)	129.3 (134.1)	134.6 (139.8)	135.9 (141.3)
한국 (%)	76.1 (83.7)	93.4 (96.3)	113.3 (128.09)	110.8 (128.7)	111.1 (127.0)	116.8 (134.7)	123.8 (142.5)	126.3 (148.1)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한국은행

주 : ()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한편,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경제활동별, 연령대별 가구의 가계부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득층이 전체 부채의 60% 이상을 보유하여 가계 부채 발생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4분위와 5분위에 전체 가계의 소득, 금융자산,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부문별로는 소득 65%, 금융자산 67%, 부동산 자산 62%가 소득 4분위와 5분위 계층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소득 1분위는 12%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부문별로 부채 상환 능력을 비교하여 보면 취약 계층의 상황이 심각하다. 소득 1분위의 유동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3.06으로 소

특 5분위의 1.88보다 1.6배 높다. 또한, 가구주 기준으로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60대 이상 보다 2.6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용직과 가족봉사자가 전체 가구에 비해 1.4배 높다. 마지막으로,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1.5배 높다. 셋째, 경기 침체 시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의 시점 비교를 통해 가계 재무구조를 살펴본 결과, 경기 침체 시 소득 1~2분위 저소득층의 부채 비중은 26%에서 41%로 15%p로 증가하였고, 저소득층의 금융 자산 비중은 23%에서 12%로 9%p 감소하였다.

〈표 2〉 가계별 유동자산 대비 부채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소득 분 위 별	1분위	3.86	4.06	3.38	5.97	2.90	3.54	3.06
	2분위	2.74	1.74	2.70	12.08	2.38	2.18	2.55
	3분위	2.17	2.12	2.82	2.71	4.00	2.92	2.54
	4분위	1.51	2.22	1.92	1.89	2.31	2.71	2.73
	5분위	1.08	1.47	1.75	1.95	2.25	1.97	1.88
경 제 활 동 별	상용	0.79	0.76	0.75	0.88	0.82	0.83	0.96
	임시	1.19	1.25	1.12	0.56	0.80	1.39	0.96
	일용	1.44	1.22	1.31	0.75	1.94	1.27	1.44
	고용주	1.01	1.10	1.25	1.35	1.39	1.22	0.96
	자영업자	1.42	1.45	1.32	1.23	1.18	1.12	0.99
	가족봉사자	1.71	1.78	1.50	1.43	1.83	1.31	1.35
연 령 별	30대이하	1.45	2.21	2.18	4.38	2.39	3.00	3.31
	40대	2.03	2.13	2.49	2.62	3.06	2.78	2.74
	50대	1.39	1.67	2.17	3.16	2.57	2.54	2.55
	60대이상	2.02	1.77	1.85	1.55	2.00	1.47	1.29
성 별	남자	1.70	1.92	2.19	2.83	2.53	2.33	2.24
	여자	1.39	3.07	2.22	3.04	2.65	3.55	3.44

자료 : 한국노동패널(KILPS), 3차~9차 조사.

Ⅲ.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 평가

외환위기 이후 국내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을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조사 결과와 한국노동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 측면에서 보면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세가 평균보다 낮고, 체감 소득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분위 상위 40%와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첫째,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세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의 1995~2008년 소득 증가율은 명목 5.4%, 실질 1.9%, 체감 0.8%인데 반해 소득분위 하위 40%는 이보다 낮은 명목 5%, 실질 1.5%, 체감 0.4%를 기록했다. 둘째, 저소득층의 체감 소득이 악화되고 있다. 소득 분위 하위 40%의 명목과 실질 소득은 1996년 대비 각각 68.3%,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저소득층의 체감 소득은 1996년 108.9만원에서 2008년 2/4분기 106.6만 원으로 2.1% 하락했다. 셋째, 소득분위 상위 40%와의 격차도 심화되었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득 수준은 상위 40%의 소득 수준에 비해 명목, 실질, 체감 모두 33.5% 정도에 불과하다. 또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하위 40%의 상대 소득 비중은 명목, 실질, 체감 소득 모두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35.1%에서 2008년 2/4분기 33.5%로 오히려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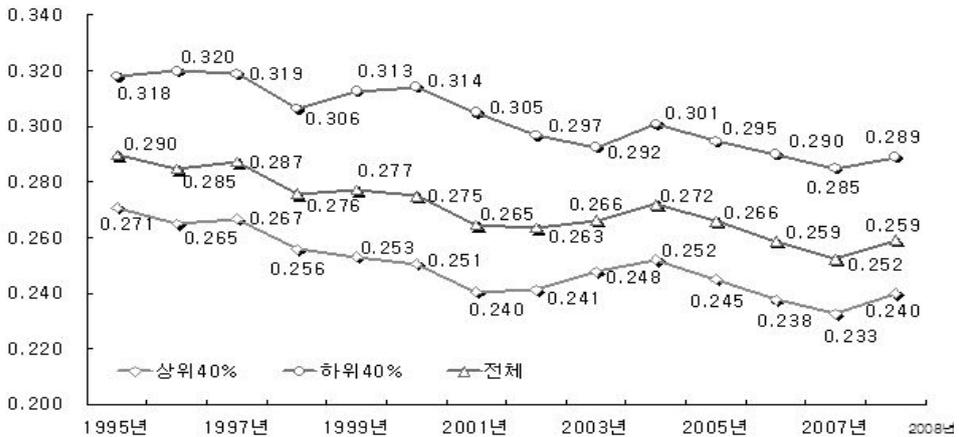
〈표 3〉 계층별 명목, 실질, 체감 소득의 추이

구분		전체 소득			
		1996년	1998년	2008년	1995~2008년 평균 증감률
평균	명목	2,152,473	2,132,761	3,761,436	5.44
	실질	2,051,537	1,810,186	2,397,958	1.87
	체감	2,031,018	1,707,438	2,063,435	0.75
상위 40%	명목	3,283,811	3,342,084	5,800,154	5.58
	실질	3,129,824	2,836,602	3,697,663	2.01
	체감	3,098,519	2,675,593	3,181,828	0.87
하위 40%	명목	1,154,235	1,076,206	1,943,259	5.04
	실질	1,100,109	913,432	1,238,849	1.52
	체감	1,089,106	861,585	1,066,026	0.40

자료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조사 결과.

주 : 2008년은 2/4분기 조사 결과 기준임.

다음으로 소비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세가 평균보다 낮고, 체감 소비가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상위 40%와의 격차도 심화되었다. 더욱이 엔겔계수의 재상승, 가난 승계 가능성 증대, 삶의 질 지수 악화와 같은 문제가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첫째,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세가 평균보다 낮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1995~2008년 연평균 소비 증가율은 명목, 실질, 체감 각각 5%, 1.5%, 0.4%이나, 전체 평균 소비 증가율은 동 5.5%, 2%, 0.8%로 하위 40%보다 높았다. 둘째, 저소득층의 체감 소비가 악화되었다. 소득 분위 하위 40%의 명목과 실질 소비는 1996년 대비 각각 70.6%,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감 소비는 1996년 87.7만원에서 2008년 2/4분기 87만 원으로 0.8% 하락하였다. 셋째, 상위 40%와의 소비 격차 또한 심화되었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비 수준은 상위 40%의 소비 수준에 비해 명목, 실질, 체감 모두 47.9% 정도에 불과하다.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하위 40%의 상대 소비 비중은 명목, 실질, 체감 소득 모두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48.9%에서 2008년 2/4분기 47.9%로 악화되었다. 넷째, 엔겔계수(Engel' s coefficient)가 재상승하였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엔겔계수가 2007년 0.285에서 2008년 2/4분기 0.289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겔계수의 상승은 전체 소비 가운데 식료품 소비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는 결국 저소득층의 소비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 통계청, 가계소비동향조사 결과.
 주 : 2008년은 2/4분기 기준임.

<그림 2> 소득분위별 가계 엔겔계수 추이

1) 본고에서는 소득과 소비, 부채와 자산에 대해 명목, 실질, 체감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명목치와 체감치의 차이 뿐 아니라 저소득층 경제의 개선 정도에 대한 체감도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위해 시계열 자료를 데이터의 시작연도인 1995년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를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다섯째, 저소득층의 가난 승계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경우 다음 세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교육 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비중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난 승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1995~2008년 명목 기준 교육비 지출 평균 증감률은 5.9%로 전체 평균 6.9%와는 1%p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체감 기준으로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음 세대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표 4〉 소득분위별 교육 지출 규모 추이

구분		전체 소득			
		1996년	1998년	2008년	1995~2008년 평균 증감률
평균	명목	136,433	139,307	266,093	6.89
	실질	130,035	136,364	118,237	3.31
	체감	128,735	111,526	145,973	2.15
상위 40%	명목	197,757	211,044	377,900	7.04
	실질	188,484	179,124	240,915	3.44
	체감	186,599	168,957	207,307	2.27
하위 40%	명목	79,453	75,070	147,348	5.94
	실질	75,727	63,716	93,936	2.44
	체감	74,969	60,099	80,832	1.31

자료 : 통계청, 가계소비동향조사 결과.
주 : 2008년은 2/4분기 기준.

〈표 5〉 소득분위별 삶의 질 지수 추이

		1995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5년	2008년
평 균	명목	25.97	31.88	31.88	43.41	63.80	75.63
	실질	36.16	42.15	34.07	47.51	57.98	62.01
	체감	42.62	48.65	35.85	47.76	54.81	56.15
상위 40%	명목	35.30	44.08	44.57	60.20	83.98	101.67
	실질	51.11	60.91	51.83	69.93	80.61	88.85
	체감	59.79	69.95	55.16	71.36	77.76	82.65
하위 40%	명목	17.50	21.32	20.96	28.57	46.30	52.80
	실질	22.53	25.96	18.85	27.74	38.41	38.53
	체감	26.95	30.24	19.29	26.94	34.94	32.97

자료 : 통계청, 가계소비동향조사 결과.
주 : 2008년은 2/4분기 기준.

여섯째, 삶의 질 지수²⁾ 또한 악화되고 있다. 가계 소비 지출 항목 가운데 삶의 질과 관계가 깊은 주거, 광열수도,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통신 5개 부문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부분별 지수를 표준화 과정을 통해 산출하였다. 그 결과 소득분위 하위 40%의 경우 삶의 질 지수가 명목으로는 1995년 17.5에서 2008년 52.8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실질로는 2006년 40에서 2007년 39.4, 2008년 2/4분기 38.5로 최근 악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소득분위 상위 40%와 소득분위 하위 40%와의 명목, 실질, 체감 삶의 질 지수 격차는 1995년 각각 17.8, 28.6, 32.8에서 2008년 2/4분기 동 48.9, 50.3, 49.7로 확대되었다.

〈표 6〉 소득분위별 가계의 평균 자산 및 부채 증가율(1999~2006년)

	평균			상위 40%			하위 40%		
	명목	실질	실질	명목	실질	실질	명목	실질	실질
자산	7.4%	4.3%	3.4%	8.6%	5.5%	4.6%	10.1%	6.9%	6.0%
부채	27.0%	23.3%	22.3%	9.2%	6.1%	5.2%	51.0%	46.3%	45.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주 : 부채규모는 1. 금융기관 부채 2. 비금융기관 부채 3. 개인적으로 빌린 돈 4. 전세금 임대보증금 5. 부어야 할 계 6. 기타 부채의 합임.

〈표 7〉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각 분위별 자산과 부채 비중

	평균			하위 40%		
	1999년	2000년	2006년	1999년	2000년	2006년
자산	72.9%	70.1%	66.5%	43.1%	46.5%	39.6%
부채	61.0%	55.4%	125.8%	30.0%	2.04%	74.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주 1. 부채규모는 1. 은행예금 2. 주식, 채권, 신탁 3. 저축성 보험 4. 아직 타지 않은 계 5.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6. 기타 자산.

2. 상대 비중 산출 결과는 명목, 실질, 실질체감 모두 동일.

2) 삶의 질 지수는 위에서 말한 5개 지표를 대상으로 1995~2008년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분별 지수를 표준화 과정을 통해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고, 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부채 증가율은 명목 부채 기준으로 1999~2006년 연평균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체 소득분위 연평균은 27%, 상위 40%는 9.2%에 불과했다. 둘째, 저소득층의 경우 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빨랐다. 명목 기준 1999~2006년 연평균 부채 증가율과 자산 증가율과의 차이는 소득분위 하위 40%가 40.9%p로 전체 소득분위 평균이 19.6%p, 소득분위 상위 40%의 0.6%p에 비해 매우 높았다. 셋째,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소득분위 하위 40% 자산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 부채 규모는 급증하였다.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소득분위 하위 40% 자산의 상대적 비중은 43.1%에서 39.6%로 3.5%p 하락하였다. 하지만 부채의 상대적 비중은 30%에서 74.9%로 44.9%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저소득층 가계부채 해소 및 생활 안정 방안

이상 논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저소득층의 소득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이것이 또 저소득층의 삶의 질과 다음 세대의 계층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해 가계의 임금 소득을 높임으로써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건, 복지, 육아, 환경, 간병 등의 분야에 있어서 창출되는 사회적 일자리의 일정 부분을 서민층 가계에 할당하는 등 서민층 가계 대상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저소득층 가계부채 해소와 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 가계에 대한 부채 만기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 만기구조의 장기화 지원책을 통해 급격한 가계 부채 조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을 위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정책적인 협력 방안 모색도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가계를 대상으로 한 ‘가계 부채 조정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서울시가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울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저소득층 대상 ‘장기고용 장려제도’의 마련, 육아·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저소득층 근로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계의 근로 소득을 확대시켜야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고용을 보장하는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우대나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저소득층 대상 ‘장기고용 장려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저소득층 밀집 지역 또는 교통 요충지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육아·보육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계 구성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빈민금융제도(Microfinance)나 금융 NGO의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들의 금융 소외 현상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재 약 7천여 개의 대인금융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25~30%의 높은 이용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소규모 창업대출과 밀착된 사후관리를 중시하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의 창업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대출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단체, 대형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담보 및 신용이 약한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금융 NGO를 도입하는 것도 저소득층의 가계부채와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여섯째, 미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스템과 직업훈련 시스템 및 기업의 연계를 지원·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립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국가적인 인재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게는 무엇보다 서울시라는 특정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과 소득 창출 기회의 증대가 시급하다. 일본의 미에현의 경우 ‘미에현기업입지촉진조례’를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밸리구상관련산업입지촉진보조금’, ‘산업집적촉진보조금’, ‘연구시설·과소지역등입지촉진보조금’, ‘구조개혁특별구역내연구개발시설보조금’ 등을 마련,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뿐만아니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와 유사한 기업 유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국내 회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문헌

- 성영애,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변동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7권 제4호, 2006 12월
- 이부형·이성룡, 「국내 가계부채의 특성과 해소 방안」, 『한국경제주평』, 2008년.
- 이부형·이성룡,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서민경제 현황과 과제」, 『한국경제주평』, 2008년.
- 통계청, 가계소비동향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 Meral Karasulu, Stress Testing Household Debt in Korea, IMF Republic of Korea: Selected Issues, IMF Country Report No. 08/296, Sep 2008
- Magdalena D. Riiser etc, Developments in Household debt. An analysis of microdata for the period 1986-2003, Economic Bulletin, 2/06
- Pru Cox, John Whitley and Peter Brierley, Financial Pressures in the U.K household sector: evidence from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 Winter, 410-19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